

文 “노태우, 과오 적지 않지만 성과도”

“5.18 등은 역사적 과오...88올림픽 등 성과”

조문은 안가기로... 靑 “국가장 결정, 이견無”

국립묘지 안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하지 않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89세 일기로 세상을 떠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지만 성과도 있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다만 빈소를 직접 찾지는 않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별세한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 운동 강제 진압과 12·12 군사 쿠데타 등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지만,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북방정책 추진, 남북기분합의서 채택 등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앞서 정부는 노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國家葬)으로 치르기로 결정했다. 국가장은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가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청와대 내부서) 이견은 없었다”며 “(국가장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성명서들을 검토했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노 전 대통령의 빈소에 조화를 보냈다. 그러나 빈소 조

문은 문 대통령 대신 유명민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부수석이 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조문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아세안+3 화상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중요 다자정상회의에 참석해야 하고, 이튿날인 28일 오전 유럽 순방을 떠나는 일정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노 전 대통령의 유해를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서 “국립묘지 안장에 대한 유족 측의 요청도 없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디에 (노 전 대통령을) 모실지는 유족들 중심으로 협의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계획안’에 따르면, 장례는 서거일인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치러진다. 장례위원장은 김 총리가, 장례집행위원장은 전 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각각 맡는다. 영결식 및 안장식은 오는 30일에 진

행하되, 장소는 장례위원회에서 유족 측과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국립묘지 안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유족 측의 요구에 따라 파주 통일동산 안장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국가장을 주관하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하지만 조문객의 식사 비용과 노제·삼우제·49일제 비용,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조성 비용 등은 제외된다.

국가장 기간 동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기를 조기(弔旗)로 게양하게 된다.

전직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진 것은 2015년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으로, 최규하·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는 국민장으로 진행됐다. 이승만·윤보선 전 대통령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렀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추미애, 이재명 ‘명예선대위원장’ 맡는다

후보 직속 사회대전환위원회도 설치기로... ‘원팀’ 단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경선 경쟁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7일 오전 회동을 갖고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한 ‘원팀’ 단합에 입을 모았다.

아울러 추 전 장관이 명예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이 후보 직속 사회대전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 후보와 추 전 장관은 이날 낮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만나 2시간 가량 오찬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고 이 후보 측 박찬대 수석대변인과 추 전 장관 측 강희용 공보실장이 전했다.

강 실장은 “두 분은 민주정부 4기 수립을 위한 문재인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합심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를 위해 이 후보가 정중히 요청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상의해 추 전 장관이 선대위의 명예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 직속으로 사회대전환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오찬에서 경선과정에서의 에피소드에 대해 덕담을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대선의 성격에 대해 나름 토론하고 본인들의 견해를 나누는 자리였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 전 장관이 영광 선대위에 기여해 줘서 앞으로 원팀을 넘어서 드림팀으로 나아가는데 큰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두분의 협력과 노력을 잘 지켜봐 달라”고 했다.

이는 앞서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선대위 상임고문을 맡을 것과 당대표로서 지난 2017년 대선을 지휘한 중진인 추 전 장관에 대한 예우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전 장관은 사회대전환위원장도 겸임할 것으로 보인다.

강 실장은 “원래 상임고문 혹은 공동선대위원장의 제안이 있었지만 추 전 장관은 어떤 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며 “이 후보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모시기에는 송구하다고 해서 명예선대위원장으로 모셨고, 이를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명예선대위원장의 지위에 대해 “상임과 공동 선대위원장의 사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회동에서 추 전 장관은 “이번 대선은 우리 이성을 더 연마시켜서 다가오는 새로운 세상, 대전환이라고도 하는데, 이를 어떻게 헤쳐나가는 토대를 닦느냐 그 과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짚었다.

이어 “개혁저항세력을 뛰어넘어서, 발목 잡히지 않게 노력도 해야 하지만 그걸 뛰어넘는 큰 시야를 가져야 하는 때 같다”며 “후보님의 역할이 대단히 막중하다”고 덕담을 건넸다.

그러자 이 후보는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니까 장관께서 많이 도와주시라. 같이 해야 한다”라고 자세를 낮췄다.

추 전 장관은 또 “용광로 선대위를 상기하면서 더 크게 해야 할 것 같다. 지지층이 뜨거울 때 우리가 이겼다”고 조연했고, 이 후보도 “박용진 의원이 경선에서 여러 얘기를 했는데 ‘운동장을 넓게 쓴다’였다. 그런 측면에서 선대위 구성도 더 협력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호응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당원투표 ARS 본인인증’ 놓고 윤석열·홍준표 충돌



국민의힘 대선후보 최종경선에서 실시되는 당원투표 중 전화 ARS투표를 놓고 본인인증이 필요하다는 홍준표 의원 측과 필요 없다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신경전을 벌였다.

윤석열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주호영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후보는 어른신들의 투표방해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우리는 어제 당내 최종경선 결정을 앞두고 (일반여론조

사의) 역선택 우려가 제기되지 않았음에도 홍 후보가 주장해온 사실상 4지선다형 질문방식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양보했다”며 “수용한 이유는 정권교체라는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업 앞에서 사소한 유불리를 따지지 말자는 윤석열 후보의 양보와 결단에 의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전화 ARS투표는 사전에 등록된 책임당원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책임당원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에 투표 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추가적인 본인인

증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며 “전화 ARS 투표가 도입된 뒤에 지난번 2차투표 비롯한 이전 모든 경선에서 이렇게 투표를 진행했고 아무런 문제없이 잘 마무리됐다. 홍 후보가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전화 ARS 투표 절차를 복잡하게 해서 어른신 당원들의 투표율을 낮추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 25일 당

홍준표측, 당원 투표 중 ARS전화 때 본인인증 절차 도입 요구 윤석열측 “절차 복잡하게 만들어 어른신 당원 투표율 낮추려고”

선관위에 최종경선 당원투표 중 전화ARS 투표시 본인인증 절차 도입을 요구했지만, 당 선관위는 각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최종결정하는 경선은 일반인여론조사(50%)와 당원투표(50%)로 진행된다.

그 중 당원투표의 경우, 모바일 투표를 먼저 실시하고 모바일 투표를 하지 못한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전

화 ARS투표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모바일 투표의 경우는 보안인증번호 입력과 주민등록번호 입력의 두 가지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는데 비해 전화 ARS투표는 아무런 본인인증 절차 없이 책임당원 여부만 확인한 후에 투표 절차에 들어가도록 돼있다.

홍 의원은 선관위에 “대리투표 등의 부정투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중차대한 대통령 후보 경선이 자칫하면 부정선거 시비에 휘말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전화 ARS 투표에도 최소한 1회 이상 본인 인증 절차를 도입해 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 선관위는 26일 해당 요청을 거부하는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당 선관위측은 “2차컷오프 투표 때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3차 때 도입은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이슬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